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철승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868
----------	-------

발의연월일 : 2018. 11. 28.

발 의 자 : 권철승 · 이상현 · 김두관
김해영 · 백재현 · 유동수
김경협 · 송옥주 · 윤관석
최인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내외국인 차별적인 외국인투자 법인·소득세 감면제도 폐지와 신기술 분야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제도 확대 등의 정부 「투자유치지원제도 개편방안(‘18.7.18)」 내용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반영하는 한편, 외국인투자 정의 명확화, 외국인투자기업 미처분이익잉여금 재투자의 외국인투자 인정, 방위산업체 외국인투자 사전 허가 대상 확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공유재산 수익계약 관리 강화, 운영지침과 요령에 규정된 중요한 권리·의무사항을 법령으로 상향 입법하고 복잡한 일부 법 조문을 분리·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인투자 정의 명확화(안 제2조)

외국인이 단독 투자를 통한 법인 또는 개인기업 설립 시에도 외국인 투자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나. 외국인투자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 국내 재투자를 외국인투자자로 인정(안 제2조)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재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이익잉여금(사내 유보금)으로 공장 신·증설 등에 재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 중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외국인투자자로 인정함.

다. 방위산업체 외국인투자 허가대상에 신주 취득의 경우도 추가(안 제6조, 제35조)

국가안보 관련 산업 관리 강화를 위하여 외국인이 방위산업체의 기존 주취득을 통한 외국인투자의 경우 뿐 만 아니라, 신주 취득을 통한 외국인투자의 경우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전허가를 득하도록 함.

라.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목 조항 정비(안 제9조)

정부의 「투자유치지원제도 개편방안(‘18.7.18.)」에 따라 2019년부터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외국인투자 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 감면 세목을 정비함.

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제도 개선(안 제13조 및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국·공유재산 수의계약의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매각 후, 수의계약 요건 미준수 시 계약해제

(해제 후 환매 등 권리회복) 규정을 신설하고 , 수요자 이해 제고를 위하여 관련 법 조문을 분리·정비함.

바.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대상 확대 및 일부 규정 상향 입법(안 제14조의2)
정부의 「투자유치지원제도 개편방안(‘18.7.18)」에 따라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대상에 「산업발전법」 제5조의 첨단기술 및 제품업종 수반 기업을 추가하고,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공고)에 규정된 지원 대상 외국인투자비율, 현금지원 취소·환수 사유 등 현금지원 관련 중요한 권리·의무사항은 법령으로 상향 입법함.

사. 외국인투자지역 관련 법 조문 분리·정비 및 일부 규정 상향 입법(안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수요자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지정해제, 개발·관리 등의 내용이 혼재된 외국인투자지역 관련 법 조문을 분리·정비하고,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공고)에 규정된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계약 및 계약 해지 사유 등의 중요한 권리·의무 사항은 법령으로 상향 입법함.

아. 외국인투자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안보 관련 부처 위원 추가(안 제27조)
외국인투자의 안보관련 사전 검토 기능 강화를 위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국방부, 국가정보원, 방위사업청 등 안보 관련 부처를 추가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칠승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8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대한민국법인””을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으로, “법인을”을 “법인 또는 사업자로 등록된 국내기업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중 “따라 대한민국법인”을 “따라 대한민국 법인”으로, “1)에서 같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을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업”으로, “방법에 따라”를 “방법으로”로 하며, 같은 목 1) 및 2) 중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을 각각 “대한민국 법인 또는”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그 기업의 공장시설 신·증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은 이 법의 외국인으로 보며 외국인투자금액은 사용하는 금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포함한다)은”을 “포함한다)이”로, “제2조제1항제4호가목2)”를 “제2조제1항제4호가목”으로 한다.

제9조 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

지세 등의 조세”를 “조세”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 및 매각)”을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유재산의 관리청”을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으로, “지방공기업이”를 “지방공기업(이하 “국가등” 이라고 한다)이”로, “한다)하거나 매각”을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용·수익 또는 대부받거나 매입할”을 “임대받을”로, “같은 항에 따른 수의 계약 후에는”을 “임대받은 후에는 임대받은 날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을 “국가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18조 및”을 “제18조제1항 및”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종료되는 때에 이를”을 “끝날 때 그 시설물을”로,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을 “국가등”으로, “따르되, 필요하면 이를 외화로”를 “따르되, 이를 외화로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국유·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있는 토지등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이하 “국가산업단지”라 한다)에 있는 토지등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있는 토지등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4조·제32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는 토지등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토지등인 경우 그 임대기간은 같은 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

⑤ 제13조제3항 및 제13조의2제4항의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제13조제3항 및 제13조의2제4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의3(국유·공유재산의 매각) ① 국가등은 소유하는 토지등을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등에게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충족한 기업에 한하며, 토지등을 취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매각할 때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의4(국유·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등) ① 국가등은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토지등을 매수한 외국인투자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의 경우 국가등이 시정을

명한 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매수한 외국인 투자기업등이 이를 이행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수대금을 체납한 경우
2.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수의계약 후 계약서상의 사업착수 예정일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경우
4.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기간 동안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5.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국가등과 외국인투자기업등이 협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국가등이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등이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 국가등은 지체 없이 토지 등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비율 이상으로 다음”으로, “신축”을 “신·증설, 연구개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

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산업발전법」 제5조의 첨단기술 및 첨단 제품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제14조의2제1항제5호(중전의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업”을 “사업, 「산업발전법」 제5조의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사업 또는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재·부품사업”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개발)”을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2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 (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관리) ① 산업단지 중 국가산업단지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은 그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이 관리하고, 국가산업단지가 아닌 산업단지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은 관할 시·도지사가 관리하며, 산업단지가 아닌 지역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은 관할 시·도지사가 개발·관리한다.

- ②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공장 등을 설립하기 위하여 새로운 부지 조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외국인투자지역을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다.

③ 외국인투자지역을 제2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개발계획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계획으로 보며, 제18조제4항에 따른 고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른 고시로 본다.

④ 외국인투자지역을 제2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때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중 “산업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같은 법 제22조제2항 중 “산업단지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를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개발 및 입주계약 체결·해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미 개발이 완료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조제2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차관”을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으로, “금융위원회”를 “방위사업청장,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가안보 위해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제35조제1호 중 “기존주식”을 “주식”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9조, 제27조, 제3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공유재산의 사용·수익·대부 및 매입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및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토지등을 사용·수익 또는 대부받거나 매입하는 외국인투자기업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대한민국법인”이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2조(정의) ① ----- -----, 1.·2. (현행과 같음) 3.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법인 또는 사업자로 등록된 국내기업을--.
4.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1)에서 같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经营活动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에	4. ----- ----- ---. 가. -----따라 대한민국 법인-----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업---- ----- ----- ----- ----- ----- ----- -----방법으

<p><u>따라</u> 소유하는 것</p> <p>1) <u>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u> <u>민국국민이</u> 경영하는 기 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것</p> <p>2) <u>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u> <u>민국국민이</u> 경영하는 기 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기존주 식등”이라 한다)을 취득 하는 것</p> <p>나.·다. (생략)</p> <p><u><신설></u></p>	<p><u>로</u>-----</p> <p>1) <u>대한민국 법인 또는</u> --- ----- ----- -----</p> <p>2) <u>대한민국 법인 또는</u> --- ----- ----- ----- -----</p> <p>나.·다. (현행과 같음)</p> <p><u>라.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u> <u>이익잉여금을 그 기업의</u> <u>공장시설 신·증설 등 대</u> <u>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u> <u>사용하는 것(이 경우 외국</u> <u>인투자기업은 이 법의 외</u> <u>국인으로 보며 외국인투자</u> <u>금액은 사용하는 금액에</u> <u>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u> <u>액으로 한다)</u></p> <p>마. (현행 라목과 같음)</p> <p>5. ~ 9.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외국인투자 허가 등) ① 외</p>	<p>제6조(외국인투자 허가 등) ① --</p>

국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위산업
체를 경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2조제1항제4호가목2)의 방법
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
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내용 중
외국인투자비율 등 산업통상자
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 ⑦ (생략)

제9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
면)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
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국유·공유 재산의 임대
및 매각) ① 기획재정부장관, 국
유재산의 관리청, 지방자치단체
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포함한다)이

제2조제1항제4호가목-----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9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
면) -----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
세특례제한법」-----조세-----

-----.

제13조(국유·공유재산의 임대)
① ----- 국
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

지방공기업(이하 “국가등” 이라고 한다)이

1. ~ 7. (현행과 같음)

② _____ 임대
받은 _____

-임대받은 후에는 임대받은 날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창출 규모, 외국인투자 금액 및 기술이전 효과 등 국민 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큰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

1. ~ 3.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부터-----

-----.

-----.

1. ~ 4. (현행과 같음)

③ -----국가등-----

-----.

1. ~ 3. (현행과 같음)

④ -----

제18조제1항 및-----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하면 이를 외화로 표시할 수 있다.

1. ~ 4. (생략)

⑥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매각할 때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 및 「공공기관의

-. -----
-----끝날
때 그 시설물을 -----
-----원상회복
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
-----.

⑤ -----국가등-----

-----따르되, 이를 외화로도-----
-----.

1. ~ 4. (현행과 같음)

<삭 제>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⑦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있는 토지등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업단지”라 한다)에 있는 토지등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삭 제>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
지에 있는 토지등

⑧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유재
산의 관리청은 국가 소유의 토
지등을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
설 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
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삭 제>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
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
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
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4조
· 제32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
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
면할 수 있다.

<삭 제>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
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는 토지
등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
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토지등인 경우 그
임대기간은 같은 법 제38조에도

<삭 제>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

⑪ 제3항 및 제10항의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3항 및 제10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삭 제>

제13조의2(국유·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있는 토지등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업단지”라 한다)에 있는 토지등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있는 토지등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4조·제32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는 토지등이 「산업입지 및

<신 설>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토지등인 경우 그 임대기간은 같은 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

⑤ 제13조제3항 및 제13조의2제4항의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제13조제3항 및 제13조의2제4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의3(국유·공유재산의 매각) ① 국가등은 소유하는 토지등을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등에게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충족한 기업에 한하며, 토지등을 취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 설>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을 외국
인투자기업등에 매각할 때 매입
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0
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
리법」 제37조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
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의4(국유·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등) ① 국가등은 제13조의
3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토
지등을 매수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계약
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의 경우
국가등이 시정을 명한 후 산업
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매수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이를 이행하는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1. 매수대금을 체납한 경우
 2.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수의계약 후 계약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경우
 4.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기간 동안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5.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국가등과 외국인투자 기업등이 협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국가등이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등이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외국인투자자에 대한 현금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고도기술수반여부 및 기술이전 효과, 고용 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공장시설의 신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생략)

<신 설>

2. · 3.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 국가등은 지체 없이 토지 등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외국인투자자에 대한 현금지원) 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비율 이상으로
다음 -----

신 · 증설, 연구개발-----

--.

1. (현행과 같음)

2. 「산업발전법」 제5조의 첨단 기술 및 첨단 제품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3. · 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이하 이 호에서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분야에서 석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지거나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 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5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가.·나. (생략)

5. (생략)

② ~ ④ (생략)

제18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개발) ① ~ ④ (생략)

⑤ 산업단지 중 국가산업단지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은 그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이 관리하고, 국가산업단지가 아닌 산업단지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은 관할 시·도지사가 관리하며, 산업단지가 아닌 지역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은 관할 시·도지사가 개발·관리한다.

⑥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5. -----

-----사업,

「산업발전법」 제5조의 첨단

기술 및 첨단제품사업 또는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조제1호에 따른 소재·부품

사업-----

가.·나. (현행과 같음)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지역에 공장 등을 설립하기 위하여 새로운 부지 조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외국인투자지역을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다.

⑦ 외국인투자지역을 제6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개발계획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계획으로 보며, 제4항에 따른 고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른 고시로 본다.

<삭 제>

⑧ 외국인투자지역을 제6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때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중 “산업단지”를

<삭 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같은 법 제22조제2항 중 “산업단지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를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로 본다.

⑨ 이미 개발이 완료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⑩ (생략)

⑪ (생략)

⑫ 제5항에 따른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삭제>

⑤ (현행 제10항과 같음)

⑥ (현행 제11항과 같음)

<삭제>

제18조의3 (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관리) ① 산업단지 중 국가산업단지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은 그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이 관리하고, 국가산업단지가 아닌 산업단지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은 관할 시·도지사가 관리하며, 산업단지가 아닌 지역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은 관할 시·도지사가 개발·

관리한다.

②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공장 등을 설립하기 위하여 새로운 부지 조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외국인투자지역을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다.

③ 외국인투자지역을 제2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개발계획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계획으로 보며, 제18조제4항에 따른 고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른 고시로 본다.

④ 외국인투자지역을 제2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때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

제19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① 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과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만, 도로, 용수시설, 철도, 통신, 전기시설 등 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단서 신설>

른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중 “산업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같은 법 제22조제2항 중 “산업단지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를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개발 및 입주 계약 체결·해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① -----

----. 다만, 이미 개발이 완료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p>② (생 략)</p> <p>제27조(외국인투자위원회) ① (생 략)</p> <p>②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외교부차관, <u>행정안전부차관</u>,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u>금융위원회 부위원장</u></p> <p><u><신 설></u></p> <p>2. (생 략)</p> <p>③ ~ ⑤ (생 략)</p> <p>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u>아니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7조(외국인투자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1. ----- ----- -----<u>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u>----- ----- -----<u>방위사업청장, 금융위원회</u>--</p> <p>2. <u>국가안보 위해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u></p> <p>3. (현행 제2호와 같음)</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제35조(벌칙) ----- ----- ----- -----.</p>
---	--

<p>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의 <u>기존주식</u> 등을 취득한 자</p> <p>2. 3. (생략)</p>	<p>1. ----- ----- -----<u>주식</u>----- -----</p> <p>2. 3. (현행과 같음)</p>
---	---